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보도자료	
	2026년 5월 20일(목)	민주노총 구첵회 대외협력국장 010-7760-1760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3260-1942

쿠팡 산재은폐 능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지배자는 인정하면서 왜 책임은 묻지 않는가”

온 국민이 아는 김범석의 산재은폐 증거인멸 의혹, 노동부는 왜 강제수사 회피하나
차관은 간담회 거부, 장관은 유족면담 석 달째 뭉개기… 대기업 방패막이 전락한 노동부 규탄

1. 민주노총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026년 5월 20일(수)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산재은폐 능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사태와 조직적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수개월째 기획감독 결과를 뭉개고 있으며 실질적 총수인 김범석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회피하며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2.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5일 ‘노동부 노동·산안 TF’를 구성하고, 3월 16일 쿠팡 CFS·CLS·배송센터(캠프) 등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줄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끌기식 능력 감독’이자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몸통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강제수사를 미루는 행위는 쿠팡에게 증거를 인멸할 최적의 시간을 벌어주는 공범 행위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동일인)’로 지정하며 그의 지배력과 권한 행사를 공식화했음에도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는 여전히 피의자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실질적 지배력은 인정하면서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 현실은 명백한 법 집행의 모순이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피 맺힌 증언과 강력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의 차관 간담회 요청은 거절당했고, 유가족이 석 달간 애원한 장관 면담은 묵묵부답으로 뭉개졌다”며 “공정위조차 김범석을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했는데도 노동부가 소환 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6. 고(故) 장덕준 노동자의 어머니 박미숙 님은 “아들의 산재은폐를 지시한 김범석의 메시지가 폭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기만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동원해 처벌을 피해 가려는 범죄자 김범석을 하루빨리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7.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장은 “작년 12월 김범석 의장을 고발한 뒤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나 5개월째 수사 상황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누장 수사를 규탄했다. 또한 “노동부 기획감독 담당자에게 실태 자료를 전달하려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회피했다”고 폭로하며, “쿠팡과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면, 산재은폐의 최종 책임자이자 몸통인 김범석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8. 최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물류센터(CFS) 내 근무기록 조작과 산재은폐 실태를 고발하고,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을 사법 전면에 세우지 않는다면 현장의 비극적인 죽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김범석 의장의 산재은폐 행위는 미국에서도 형사처벌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짚었다. 김 팀장은 “정부 기관들이 과징금과 처분을 미루며 뜸을 들이는 동안, 쿠팡은 한국 노동자와 소비자에게서 거둔 돈으로 미국 정재계에 로비를 벌이며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즉각 김범석을 소환해 조사하라”고 비판했다.
10.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쿠팡 자본이 노동자들의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파쇄기에 산재자료를 증거인멸하는 모습과 고용노동부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이를 묵인하고 모른 척 방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쿠팡의 산재 지우기와 정부의 무책임한 봐주기 수사 행태를 강력하게 풍자했다.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2. 기획건문
3. 발언문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구첵회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민주노총 대협국장)
- 취지 발언 : 쿠팡의 조직적 산재은폐 및 과로사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봐주기 수사 규탄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가족 발언 :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최고 책임자 처벌 촉구
 - 박미숙 님(고 장덕준 노동자 어머니)
- 현장 발언1 : 쿠팡 배송센터(캠프) 산재은폐 실태 고발 및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공개 촉구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현장 발언2 : 쿠팡 물류센터(CFS) 내 근무기록 조작 의혹 및 실질적 지배자 처벌 요구
 - 최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
- 규탄 발언 : 쿠팡의 갑질 불공정거래 규탄 및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처분 촉구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회견 낭독 및 퍼포먼스

[붙임] 2. 기획건문

실질적 지배력 인정하면서 형사 책임은 회피하는가!

노동부는 쿠광의 조직적 산재은폐를 철저히 규명하고,
실질 총수 김범석을 즉각 소환 수사하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거대 기업 쿠광 앞에서는 철저히 무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대기업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5일 쿠광의 연이은 과로사 사태와 산재은폐 의혹에 대응하겠다고며 요란하게 ‘노동부 노동·산안 TF’를 구성했다. 이어 3월 16일에는 쿠광 CFS·CLS·배송센터(캠프) 등 전국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조사를 공언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독 결과는 철저히 베일에 싸인 채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식 늑장 감독’ 이자,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눈치 보기식 봐주기 수사’이다. 노동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쿠광 현장에서는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가 자행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과거 고(故) 장덕준 노동자 사태 당시 김범석이 “열심히 일한 전산 기록을 지우라”고 직접 지시하고, 본사 차원의 비밀 대응 매뉴얼을 가동했던 상습적인 전과가 이미 언론을 통해 낱알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범죄의 몸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강제 수사를 미루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은 쿠광에게 남은 증거를 인멸할 최적의 시간을 벌어주는 공범 행위나 다름없다.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는 압수수색 등 최소한의 강제 수사조차 회피하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석을 쿠광의 ‘실질적 지배자(동일인)’로 지정하며, 그가 쿠광 그룹 전체의 절대적인 권력자이자 실질적 권한 행사자임을 공식화했다. 타 부처조차 인정한 실질적 지배력을 왜 고용노동부만 외면하는 것인가! 지배력과 권한은 누리면서,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현장의 형사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쿠광의 기만적인 행태를 노동부가 묵인하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꼴이다. 전문경영인 뒤에 숨어 책

임을 회피하는 김범석을 사법 전면에 세우지 않는다면, 쿠팡의 잔혹한 죽음의 행렬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시간 끌기식 늑장 감독과 봐주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뽕뽕 숨겨둔 기획감독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거대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회피한다면 민주노총은 노동부를 노동자의 생명을 방치한 공범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시간 끌기 늑장 감독, 수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눈치 보기 봐주기 수사 말고, 최고 책임자를 강제 수사하라!
실질 지배 인정했다, 김범석을 즉각 소환 수사하라!
본사 차원 조직적 산재은폐, 노동부는 철저히 규명하라!

2026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붙임] 3. 발언문

[발언문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차관은 거부하고 장관은 뭉개는 노동부, 대기업 쿠팡의 '하수인'을 자처하려는가”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미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거대 기업 쿠팡의 눈치를 보느라 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노동부 관료들의 기만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똑똑히 고발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쿠팡의 조직적인 산재은폐 정황을 전달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노동부 차관이자 TF 단장에게 정식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로 밝히지 않은채 거절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차관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TF 단장입니까? 쿠팡의 불법을 눈감아주기 위한 방패막이입니까?

유가족을 대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더욱 참담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가 지난 3월부터 이달 5월까지 무려 석 달 동안 피토하는 심정으로 장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 그 어떤 답변도 없이 철저한 묵묵부답으로 유가족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노동 존중과 사회적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쿠팡이 저지른 범죄의 민낯은 이미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온 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고(故) 장덕준 노동자 과로사 당시,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직접 지시한 메신저 대화가 드러났습니다. 퇴근 시각을 조작한 근무일지, '쿠팡치' 앱을 수정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 전산 조작, 고(故) 최성낙 노동자 유족을 향한 회유와 산재 취소 소송까지, 그 악질적인 행태를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밝혀내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명백한 범죄 정황을, 왜 수사권과 감독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만 똑바로 밝히지 못하고 수개월째 늑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거대 대기업 쿠팡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눈치를 보며, 스스로 쿠팡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차관은 간담회를 거부하고 장관은 면담 요청을 뭉개는 사이, 쿠팡 자본은 범죄 증거를 인

멸할 시간만 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조차 김범석 의장을 쿠광의 '실질적 지배자'라고 명시했습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휘두르는 총수는 따로 있는데, 왜 노동부는 껍데기 전문경영인 뒤에 숨은 진짜 몸통을 수사하지 못합니까? 대기업 총수 한 명 소환 조사를 못 해서 절절매는 노동부의 모습은 대한민국 특별사법경찰의 수치입니다.

민주노총은 똑똑히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기획감독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십시오. 장관은 유가족 앞에 나와 면담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해 성역 없이 수사하십시오.

정부가 끝까지 대기업의 하수인을 자처한다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으로 노동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한 원인규명 및 최고 책임자 처벌 촉구

2020년 10월 12일 쿠광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사망한 27세 청년노동자 장덕준의 엄마입니다.

쿠광 책임자 김범석의 제 아들 덕준이의 산재은폐를 지시한 메시지가 보도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쿠광과 한 팀이 되어 증거를 조작하고 축소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 되지 않았던 기록들이 보도되었고 당시 사건조사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재은폐지시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증거인멸에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이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공개되었고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 청문회장에서 위증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 답답합니다. 조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2020년 당시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라고 했고 고용노동부 차관도 제대로 조사하겠다고해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 질거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근로감독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 2년이 지난 후 겨우 확인 할 수 있었던게 특수 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10만원 처벌이었습니다. 쿠광은 덕준이 죽음에 과태료 10만원으로 책임을 다했고, 건강했던 20대 청년의 목숨값이 1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에 허탈함을 느끼며 저희의 무능력함을 타했습니다.

5년 전 그때도 기다리라고해서 믿고 기다렸더니 고용노동부는 쿠광과 협력해 사건을 조작하고 축소해 기록조차 확인할 수 없게 은폐하고 말도 안되는 처벌로 쿠광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 쿠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난 질병판정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년을 죽음의 책임에 대해 법정 다툼으로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저희는 지난 5년을 정부의 범죄가담으로 사건의 진실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죽음의 책임에 대해 쿠광과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를 해서 죽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해도 듣고 있을 수 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덕준이 죽음 후 모든 일상은 멈추어졌고 같이 살던 집과 생업과 건강까지 모든 것을 잃고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6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배신은 사랑하는 가족을 산업재해로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한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장덕준의 죽음에 쿠광 김범석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철저히 밝혀주십시오. 본인들의 죄를 덮기 위해 저지른 죄까지도 철저히 밝혀 주십시오.

지난 6년 동안 저희 가정이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술이나 약이 없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매순간 분노가 치밀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은 살아 있는게 지옥입니다.

피해를 당한 저희는 이런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죄를 저지른 쿠광 책임자 김범석은 미국을 통해 대한민국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며 압박하는 행태로 죄를 피해하려고합니다.

대한국민의 국민인 제 아들을 죽인 범죄자 외국인을 보호하는게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장덕준 죽음과 관련된 산재은폐 지시 와 증거 인멸을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이 사건의 책임자 쿠광 지배자 김범석을 하루빨리 처벌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5.20.

쿠광대구칠곡물류센터 장덕준의 모 박미숙

쿠팡 배송센터(캠프) 산재은폐 실태 고발 및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공개 촉구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장 강민욱입니다.

택배노조는 작년 12월 23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산재은폐와 원인조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의 과로로 사망한 고 장덕준 노동자의 죽음 뒤에 숨겨져있던 김범석과 쿠팡 전사적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김범석 의장이 직접 고인의 죽음을 은폐하라는 지시를 한 명백한 증거와 이를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한 본사 차원의 조직적 대응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고발장 접수 이후, 박미숙 어머님과 함께 1월 6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석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월 12일에는 이곳 서울고용노동청에 출석해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그동안 준비 자료를 모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양 기관의 조사를 받은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사 상황은 그야말로 감감무소식입니다. 현재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중순 쿠팡의 1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은폐 의혹 기획감독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해당 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그동안 택배노조가 확인해 온 산재은폐 사례들을 전달하고 기획감독에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 한번만 만나달라고, 제가 직접 세종에 내려가도 좋다고까지 하며 부탁했으나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곤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고발 이후 현재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범석의 은폐지시 메시지, 내부 문건과 이메일, 심지어 산재은폐매뉴얼까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이토록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늦장 수사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우리 수사당국과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만약 외교적·정치적 압박을 이유로 국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 범죄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이는 주권 국가의 법 집행 기관으

로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현장의 택배노동자들에게 이번 사건의 올바른 규명과 최고 책임자의 처벌은 동료들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미 수많은 동료들이 쿠팡에서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군포와 남양주, 화성동탄과 안성, 대구와 일산, 제주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산재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쿠팡의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이라는 시스템 뒤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로와 중대재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으로 기록을 조작하고 산재를 덮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처벌 없이 용인된다면, 현장의 비극적인 죽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법망을 피해 책임을 회피하는 한, 쿠팡의 위험한 질주와 조직적 범죄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통을 처벌하지 않는 한 산업재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쿠팡과 미국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기획감독 역시 쿠팡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내선 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산재은폐의 최종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하여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택배노조는 최고 책임자 김범석이 유족에게 사죄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의 갑질 불공정거래 규탄 및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처분 촉구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리기, 짐 없이 걷기, 화장실”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되지. 그들은 시간제 근로자들이야. 성과급이 아니라 시간당 급여라고”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 고 장덕준 님이 사망한 2020년 10월경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나눴던 대화내용입니다. 명백한 산업재해 은폐입니다. 그러나 당시 대화내용을 제보한 쿠팡의 제보자도 사과했지만, 정작 산재은폐를 지시한 김범석 의장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될지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노동자보다는 기업이 대우받는 나라만큼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가 한국처럼 많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예외적으로 이뤄지고, 대부분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미국에서도 산업안전보건청이 기록을 위조하지는 않는지 중대한 사건을 보고하지 않는지 조사를 합니다. 기록위조가 발각되면 형사처벌과 벌금형,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이고, 최대 2억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즉 김범석의 산재은폐 행위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경찰은 지난 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불출석 등을 이유로 쿠팡 김범석 의장이 한국에 입국하면 출입국 관리를 맡고 있는 법무부가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재은폐 사건에 대해 엄중히 조사를 해야할 노동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쿠팡의 개인 정보가 1억 5천만회 조회되었다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운운하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보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쟁조정도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김범석에게 특혜를 제공하던 동일인 지정을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김범석 동생이 경영진에서 빠지면 또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부기관들이 이렇게 땀을 들이는 동안 쿠팡과 김범석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일삼은 돈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면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형사처벌을 받았을 그가, 미국 정재계를 등에 업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미국 정재계에 뿌린 로비자금도 모두

한국의 노동자와 중소기업인, 소비자들에게서 받아간 돈입니다.

김범석이 받고 있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미국에서도 처벌을 받는다면 한국에서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산재은폐 범죄자 김범석을 소환하여 조사하십시오.

쿠팡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고 산재 은폐 매뉴얼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최종 책임은 아직 가려지지 않았고,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노동부 감독 결과 또한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들이 연달아 드러났는데도 쿠팡물류센터의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매일 매일 산재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해 여름 쿠팡 캠프 현장에서 들어온 제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동자는 일용직 헬퍼로 첫 출근한 날 현장 투입 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 자리에서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무 중 다치면 주황색 조끼를 입은 관리자에게 어떤 업무를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바로 명확하게 말하라. 다른 상처들은 소독하고 밴드를 붙이면 된다. 며칠 뒤에 와서 뼈가 부러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회사는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현장에 CCTV가 200개가 넘고 사각지대가 없어서 회사는 여러분의 동선을 다 안다. 그날 다친 영상이 없으면 산재 허위 신고를 하겠다. 산재 허위 신고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이다.”

이게 안전교육입니까. 어떤 노동자가 이런 말을 듣고 안심하고 산재 신청을 하겠습니까.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노동자는 산재 신청하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은 산재 신청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현장에서 이루어진것은 아무리 일하다 다쳤어도 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회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을 하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다쳤을 때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노동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산재 신청을 방해하지 않으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히려 회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징계·업무배제 등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4년, 쿠팡 캠프에서는 고 김명규 노동자가 야간노동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 이후 현장에는 혈압측정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 한 번 마시러 가기 어려운 노동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아픈 노동자를 보호하고 현장을 바꾸는 대신,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방식으로 현장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캠프 뿐 아니라, CFS 신선센터에서도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장구가 지급되지 않는 일이 반복됩니다.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게 “출근해서 일하지 말고 앉아만 있어달라”며 공장처리로 유도하고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이 산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제보하는 대상은 EHS, 안전보건팀입니다. EHS가 산재 신청이 어렵다고 말했다, 안전보건팀이 회사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제보가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안전보건팀의 역할은 산재 신청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현장에서는 산재 은폐 매뉴얼이 발견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다쳐도 “네가 부주의했다”, “그날 영상이 없다”, “며칠 뒤에 말했으니 믿기 어렵다”, “허위 신고일 수 있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곳입니다.

고 장덕준 노동자의 죽음도 그렇게 묻으려했습니다. 명백한 과로사로 판명이 났음에도 죽음의 원인을 장덕준님의 문제로 왜곡했습니다. 그렇기에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은 어느 현장 관리자 한 명의 말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본사 차원의 대응 매뉴얼, 그리고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 회피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노동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쿠팡 산재 은폐 기획감독 결과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현장의 산재 은폐와 공장처리 유도, 산재 신청 방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 수사하십시오. 노동부는 쿠팡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